

건설동향브리핑

제516호 (2015. 6. 22)

■ 정책 · 이슈

- 201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과 동향
- 2030년 도시와 주택의 미래

■ 경영 · 정보

- 서울시민 29%, “주요 인프라 시설 안전 상태 불만족”

■ 경제 동향

- 5개 지방 광역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산업 선진화, 도급(都給) 자격 명확화부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과 동향

- 수주 누계 7,000억 달러 목전, 지속가능성 위해선 중동 대체시장 발굴 시급 -

■ 2015년 6월 현재 수주 누계 7,000억 달러 목전

- 2015년 6월 17일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수주 누계액 6,996억 달러를 기록, 수주 누계 7,0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음.
 - 1965년에 태국 도로공사로 첫발을 내디딘 해외건설은 금년으로 50년째를 맞이함.
 - 1998년 IMF 금융위기에 기인한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라 해외건설 보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난 50여 년 간 부침도 있었으나, 제3차 성장기를 맞은 2007년 이후 수주 실적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에 이르렀음.

■ 지역별 : 중동지역 수주 저조로 6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

- 2015년 6월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은 242억 달러, 2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72%, 공사 건수 기준으로는 84% 수준에 불과
 - 지역별 수주 실적을 보면, 중동이 26건, 68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으로 54%, 금액 기준으로 72%나 감소해 전체 해외건설에서의 비중이 28.3%에 불과
 - 반면, 아시아는 174건, 118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12% 감소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10%나 증가하여 전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의 49.2% 차지
 - 아시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35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가스 액화 처리공장을 수주함에 따라 큰 폭 증가. 이 외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체 공장을 설립하고, 제일모직 등이 진출한 베트남과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수주 증가세
 - 이 외에 태평양·북미와 중남미의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수주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태평양·북미의 경우 10건, 10억 1,30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으로 745.1% 증가. 중남미는 24건, 41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공사 건수와 수주 금액이 각기 100%, 259%나 증가함.
- 이라크 내전과 유가 하락이 중동 수주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
 -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전년에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던 이

라크의 경우 지속되는 내전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 외에 UAE, 알제리 등도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 취소 및 지연 등으로 인해 금년도 수주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각기 36%와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임.

■ **공종별 : 예년과 달리 건축 큰 폭 증가, 토목과 산업설비는 저조**

- 중동 지역의 수주 실적 저조는 산업설비 실적 저조를 반영
 - 예년에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70~80% 내외를 차지하던 산업설비의 경우 2015년 6월 현재 149억 5,2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8%나 감소하여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61.8%로 비중이 낮아짐.
 - 토목도 예년과 달리 저조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9%나 감소한 22억 7,13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여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9.4% 차지. 반면, 최근 수년 간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건축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16.1%나 증가한 48억 3,860만 달러를 기록, 201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의 20.0%를 차지함.
 - 이 외에도 용역 수주의 증가세가 뚜렷해 전년 동기 대비 188.7%나 증가한 16억 3,200만 달러를 기록
 - 공종별 수주를 상품별로 보면, 산업설비의 감소는 정유, 가스시설 수주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목은 도로, 철도 등 교통 부문의 수주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 반면, 그동안 수주가 저조했던 건축은 학교, 공장, 주택, 사무실, 상가 등 다양한 상품에서 수주 증가

<해외건설 지역별 · 공종별 수주실적(2015.6.17 현재)>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별 수주 실적				공종별 수주 실적			
지역	금액	비중	증감률	공종	금액	비중	증감률
중동	6,848.9	28.3	-72.3	토목	2,271.3	9.4	-23.9
아시아	11,892.7	49.2	110.5	건축	4,838.6	20.0	216.1
태평양 · 북미	1,013.0	4.2	745.1	산업설비	14,952.7	61.8	-44.8
유럽	64.2	0.3	-85.9	전기	486.4	2.0	81.2
아프리카	213.9	0.9	-56.6	통신	6.5	0.03	-96.2
중남미	4,154.7	17.2	259.1	용역	1,632.0	6.7	188.7
합계	24,187.4	100.0	-25.9	합계	24,187.4	100.0	-25.9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2030년 도시와 주택의 미래¹⁾

- 저출산 · 고령화 외 숨겨진 변화 많아, 변화 및 위협 요인에 적극 대응 필요 -

■ 지구촌 인구 2/3의 미래와 직결된 도시의 미래...변화에 대한 적응과 위협에 저항 중

- 2014년 현재 전세계 도시인구비율은 54%(39억 명), 2050년에는 지구촌 인구의 2/3가 도시에 거주,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2014년 28개에서 2030년에는 41개로 늘어날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s*, UN, 2014)
 -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 인구들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도시의 주택과 인프라 시설은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되지만 고령 인구는 투자 여력이 줄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545만 명) 대비 2030년에 약 2.3배(1,269만 명) 늘어나는 반면, 30년 이상 노후 주택 수는 2010년(135만 호) 대비 6.8배(902만 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197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압축 경제성장 시기에 건설된 주요 인프라 시설물도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 저출산 -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기조의 고착,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등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예고된 부정적 변화이지만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숨겨진 변화 요인, 위협 요인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부정적인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진보,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협 요인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기도 함.
 -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면서 건물의 자재와 자원이 진화되고,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토지와 공간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다변화(지하, 공중 공간, 간척지 등), 3D 프린터, Plug-in 기술은 공간 배치와 프레임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음.
 - 저성장 양극화로 인한 지불능력 저하, 인프라 시설 노후화, 자연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한 취약성 확대 등 안전과 방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불안 요인도 계속 등장
-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전개
 - 협소주택, 이동주택, 중정 및 옥상의 활용 등 부족한 토지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등장
 - 골목길, 용도 폐기된 공공건축물 등 쇠퇴한 공간이 재생을 통해 사람들이 즐겨 모이는 공간, 필요한 공간으로 변모함으로써 개발의 방향이 공간의 이용가치 증진으로 전환

1) 본고는 (사)한국미래전략학회 2015년 춘계 심포지엄(5.29)에서 발표된 제3주제인 「미래와 도시」를 요약하였음.

- 임대주택도 중상층으로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 기능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대안적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진화
- 경제적 양극화의 해결을 위한 공간의 공유, 나눔 등 대안적 · 상생적 소비 방식도 등장
- 한편, 주택의 양적 과잉 공급에도 불구하고 질적 빈곤은 더욱 심화, 일하고 싶은 사무실, 살고 싶은 주택, 가고 싶은 상업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

<도시와 주택의 미래 전망과 예상되는 대응 반응>

패러다임의 변화

- 주택가격 변동 및 경기 사이클 : 저성장 불균형 심화
- 주택의 개념과 기능, 소비방식의 변화
 - ✓ 주택의 주된 기능이 은신처에서 숙박공간의 하나로 변화(임시, 단기간 거주 수요 증가)
 - ✓ 주택보유율 하락 - 임차수요 증가
 - ✓ 임대주택의 진화 : 저소득층의 주거지에서 중산층의 주거지로,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융합
- Affordability의 저하(구입할 수 없는 주택-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변화에 적응하고 저항하며 진화

-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간이 진화
 - ✓ 협소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대안의 등장
 - ✓ 도시골목의 재생과 변화
 - ✓ 옥상정원 및 도심공원의 확대
- 소유 및 점유방식의 유연화
 - ✓ 공유주택, 셰어 하우스 : 공간의 대안적- 상생적 소비

상대적 결핍과 빈곤

- 소요 및 수요는 감소해도 선호는 뚜렷 → 선호하는 공간으로의 쏠림
 - ✓ 공급되는 건축물 증가하지만, 일하고 싶고, 살고싶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은 부족
 - ✓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일자리가 가까운 공간의 부족

■ 안전한 도시조성과 성능향상이 도시 미래 좌우, 인프라 투자와 주택자산 유동화도 과제

-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도시의 물리적 안전을 계속 위협, 범죄 테러 등 사회적 재난 증가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안전제고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투자자금이 부족, 건축물의 성능저하는 가속화될 우려가 잠재
- 감가상각 및 성능저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적절한 유지보수 투자 독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자산의 유동화 지원, 노후 인프라 시설 보수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선제적 투자가 요구됨.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서울시민 29%, “주요 인프라 시설 안전 상태 불만족”¹⁾

- 서울시민 1,000명 인식조사 결과, 투자 수준에 대해서도 57.2%가 ‘충분하지 않다’ 답변 -

■ ‘서울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안전 및 성능’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안전 및 성능, 방재시설물 확충, 현재 및 향후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인프라는 물관리시설(상수관, 하수관, 빗물저감시설 등), 교통시설(도로포장, 교량, 지하철), 학교(초/중/고),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체육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 주요 인프라 안전 상태에 대해 29%가 불만족

-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질문한 결과 시민의 약 29.1%가 불만족으로 답변. 중립(보통) 의견이 49.7%, 만족이상 21.2%임을 감안할 때 불만족에 대한 의견은 의미있는 수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30~40%가 불만족 이상으로 응답
 - 교통시설의 경우 20~30%가 불만족 이상으로 응답
 - 학교는 30% 이상이 불만족 이상으로 응답
 - 다중이용시설은 20~30%가 불만족 이상으로 응답
- 주요 인프라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투자 수준에 대해서도 57.2%가 ‘충분하지 않다’ 이상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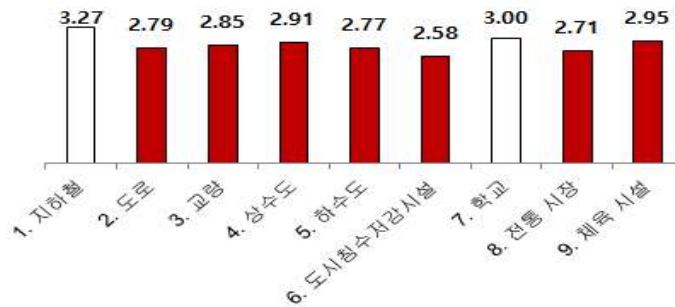
■ 방재시설 확충 수준에 대해서도 70.8%가 불충분하다고 평가

- 지진 대응에 있어서도 시민의 78.4%가 불만족 이상으로 답변함.
- 서울시 주요 인프라 시설의 성능 수준에 대한 인식 역시 35.1%가 ‘우수하지 않다’ 이상으로 답변함. ‘보통이다’가 50.3%, ‘우수하다’ 이상이 14.6%인 것으로 나타남.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공공시설 안전 및 성능 관련 인식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성능에 대해 ‘중립’이 과반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고 해석할 경우 성능 역시 안전과 마찬가지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설별로도 지하철을 제외하고 대부분 3.0(보통) 이하로 인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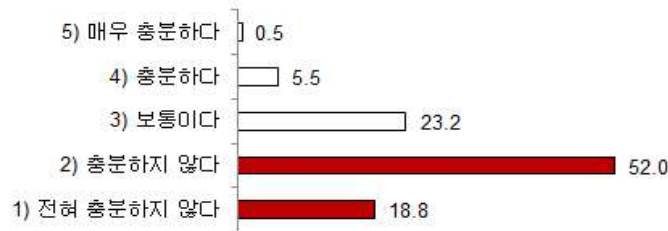
<서울시 주요 인프라 시설별 성능 수준 만족도>



주 : 1점 매우 미흡~5점 매우 우수

<방재시설 확충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



■ 주요 인프라에 대한 안전 및 성능 개선 투자의 공감대는 충분

- 관련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 60~70%가 찬성함.
 - 향후 투자 우선순위로는 도로(76%)>침수저감시설(73.4%)>지하철(72.7%)>학교(68.3%)>하수도(66.7%)>상수도(65.6%) 순으로 응답
- 재원 마련 방법으로 서울시 재정 지출 항목의 조정(찬성 이상 64.7%, 반대 3.7%)과 서울시 재정의 확충(찬성 62.5%, 반대 3.3%)을 가장 높게 지지함.
 - 국가재정지원 비중 확대(찬성 57.6%, 반대 7%)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
 - 이 외에도 시설물 사용료의 현실화(찬성 44.4%, 반대 13.1%)와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찬성 41.4%, 반대 19.2%)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음.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5개 지방 광역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 순환주기 분석 결과, 대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울산 상승세 계속될 듯 -

■ 2014년 연간 3.54% 상승, 2015년 5월 현재 2.43% 상승

- 지방 5개 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다르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부산 : 2013년 9월부터 19개월 연속 상승세. 2015년 들어 상승폭이 확대
 - 대구 : 2010년 8월부터 58개월 연속 상승세. 2015년 들어 상승폭 확대와 더불어 월간 1% 내외의 상승률 기록
 - 광주 : 2012년 9월부터 33개월 연속 상승세. 2015년 5월까지의 누적 상승률(3.09%)은 2014년 연간 상승률(2.96%)을 상회
 - 대전 : 2012년부터 매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연간 1% 미만의 상승률 기록
 - 울산 :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과 4월을 제외한 기간에서 상승률 시현. 2015년 들어 5월까지 1.79%의 상승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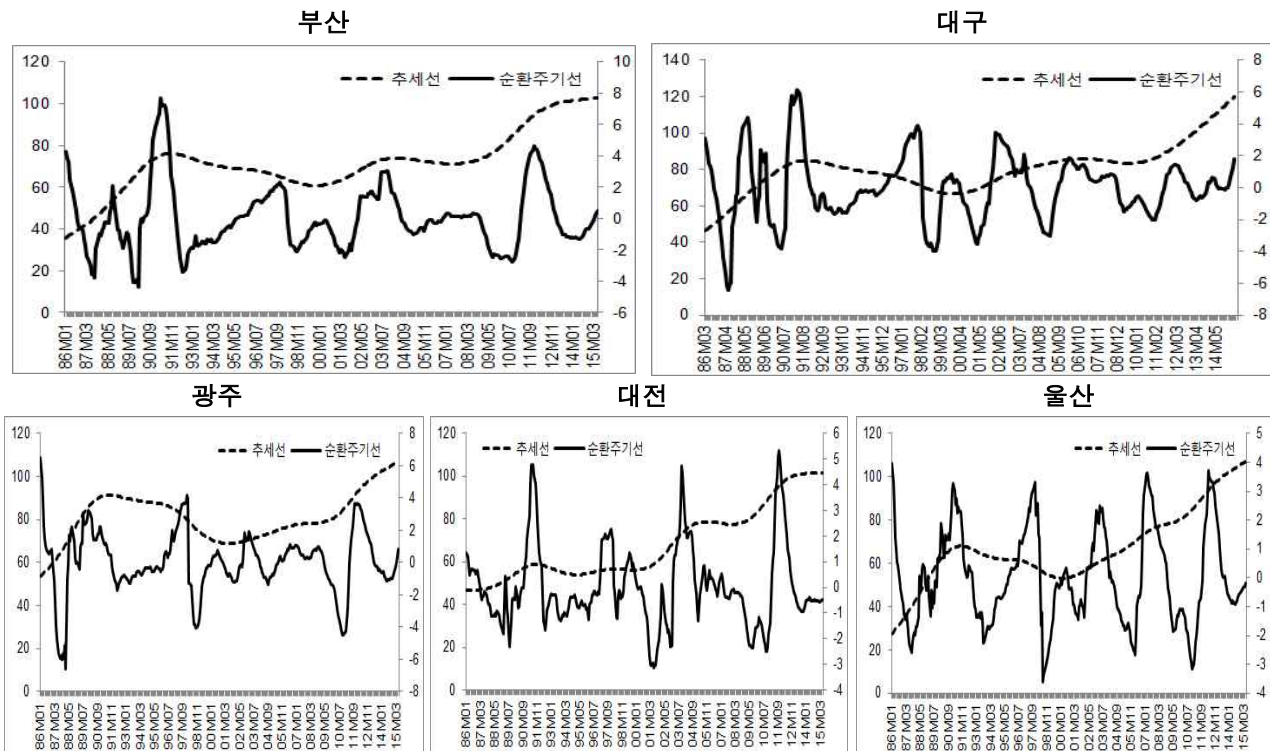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 순환주기 분석¹⁾ 결과, 대전 제외한 4개 지역 상승세

- 부산은 추세선과 순환주기선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추세선은 201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순환주기선은 2014년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상승기간이 12개월로 이전 상승기간보다 짧은 상황임.
- 대구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추세선과 순환주기선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추세선은 부산보다 가파르며, 2013년 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순환주기선은 최근 순환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나, 2014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6개월 간 상승 중임.
- 광주는 추세선과 순환주기선이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추세선은 2001년 6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경기 순환 주기적 특징과 시사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엄근용, 2011.11) 참조

- 순환주기선은 2014년 6월 이후 11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대전은 추세선과 순환주기선 모두 횡보세를 보이고 있음.
 - 추세선은 2014년 4월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순환주기선은 2014년 8월 이후 매월 등락을 반복하면서 L자형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울산은 광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추세선과 순환주기선 모두 상승세를 보임.
 - 추세선은 2000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순환주기선은 2014년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10개월 연속 상승 중으로 이전 주기의 상승기간인 16개월과 비교시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 있음.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의 추세선과 순환주기선>



주 :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HP필터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추세선은 좌축, 순환주기선은 우축 지표임.

■ 지방 광역시, 당분간 상승세 지속 전망

-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HP(Hodrick-Prescott)필터에 의한 순환주기 분석 결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에서 추세선과 순환주기선이 상승폭과 상승기간 등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염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10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규제심사회의'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참여 -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논의
6. 12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기금과 주최, '부동산 금융실무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최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동향 점검
6. 18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정책국 주최,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해외건설의 견실성장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6. 25(목) 14:00~16:30,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해외건설협회
- 발표 주제
 - 제1주제 :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발제자 : 최중석 해외건설협회 박사)
 - 제2주제 : 글로벌 건설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건설기업 성장 전략
(발제자 :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해외건설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지수 도입 방안
(발제자 :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6. 30(화) 14:00~17:00,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발표 주제
 - 제1주제 : 2015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발제자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2015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발제자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산업 선진화, 도급(都給) 자격 명확화부터

최근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논란을 기점으로 건설업역의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많다. 정부는 건설업역 유연화를 추구하는 이유로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이 칸막이식 업역으로 나뉘어 있어 업역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법적으로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국 건설업 면허체계를 보더라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업종별 면허자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체계나 생산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주 방식의 다양성을 건설업역의 유연화와 혼동하는 사례도 많다. 일부 국가나 주에서는 건설업면허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종별 영업범위를 없애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복합공종의 공사라면 당연히 동일한 복합공종의 수행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설령 면허 제도가 없더라도 개별 전문공사의 시공경험을 갖고서는 복합공사의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복합공종 공사라 해서 반드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는 면허 요건상 기능인력을 동원해 토공사나 방수, 도장공사 등 단일 개별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적인 공사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건설업 면허제도를 운영하면서 업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일본에서는 ‘건설업면허 가이드라인’에서 업종별로 구체화된 업무를 명시하여 업종 간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공공도로 하부의 하수도 배관 및 하수처리장의 부지조성, 농업용수도나 관개수로는 ‘토목일식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업역 관련 분쟁은 업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건설업 면허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해당 업종별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업종별 업무 구분을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하고, 전문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합공사 수주를 허용하는 것을 건설업역의 유연화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은 복합공종일지라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시공자격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예외 규정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를 확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체계를 붕괴시키고, 현행과 같이 문턱이 낮은 공공입찰제도에서 입찰용회사를 범람시키거나 부적격자의 낙찰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건설신문, 2015. 6. 8>

최민수(건설정책연구실장 · mschoi@cerik.re.kr)